

대기업 갑질 피해 사업자 지자체 지원 파산 사례 방지

송성환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법률지원 제도 등 포함 공정위 의결서·공정거래조정원 결정서 있으면 지원 가능

전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대기업 갑질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장기간 소송 과정에서 제때 배상을 받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7,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사업자 신속, 공정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사업자의 재기를 돕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조례안이 규정한 갑질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형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서 명시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송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지사는 갑질 행위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지금이나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위의 의결서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정서를 첨부해야 신청할 수 있다.

도의회는 지역 유가공업체가 대형

마트의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강요당하며, 큰 손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부도위기에 내몰리자 지난해 10월, 대기업 갑질 피해기업의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청와대와 공정위, 중소벤처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중소업체가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와 갑질 피해를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아도, 대기업에 부과된 막대한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될 뿐 피해기업은 10년에 가까운 소송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파산하게 된다"며 조례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갑질 행위로 파산위기에 처한 피해사업자들이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88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며, 28일 열리는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호상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2.0' 비전 선언

한국판 뉴딜 계획 수립 1주년 기념 4차 전략회의

문 대통령 "투자금액 160조에서 220조로 확대"

'휴먼뉴딜' 개념 확대 개편... 교육·돌봄 등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발전·보완한 '한국판 뉴딜 2.0' 비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사회 구조 변화의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 문재인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발전·보완한 거시 경제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크게 4가지 정책을 뼈대로 하고 있다.

총 투자 규모가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되는 '한국판 뉴딜 2.0'은 기존 '사회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 개편해 교육·돌봄·청년정책 등을 강화하는 한편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사업 육성,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등 신규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코로나의 위기에 여전한 가운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진전해왔다"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위기극복뿐 아니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희망을 만들어 왔다"

며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판 뉴딜은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됐다"며 "우리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T(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됐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단계적 진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판 뉴딜 2.0'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며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업무자 기준 전 면적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며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

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엑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돼 실용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여겠다"며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규명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전환을 이루겠다"며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참석자를 최소화했다.

/뉴시스

도 '투트랙 전략 중심 제2차 전북형 뉴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아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 추진결과 미중용 재정투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비대면 거래·교육 확산 저탄소·친환경 산업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돼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과 투자성 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기 계획된 정부 조성자금 잔여금 1천억원을 활용해 '국민참여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안에 주요 분야의 세부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기 수립한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이후 사업별 성과지

표에 따른 추진상황 및 공모대응과 '22년 예산확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분기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공정을 점검했다.

지난 2분기(6월말 기준)까지 점검결과 총 270건 20조 4,758억원 규모로 전북형뉴딜을 재편, 올해 뉴딜 관련 공모사업에 21건 2,179억 원(국비 706억 원)이 선정됐고, 22년 부처예산에는 10건 2,078억 원(국비 756억 원)이 반영됐으며, 이후 최종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2.0의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와 부처별 세부정책을 반영해 하반기 중에 2022년 전북형 뉴딜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전북형 뉴딜 사업의 전개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지역균형뉴딜의 확산 및 지역연계 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지역 기본권·기본소득, 전환국가 모색'

기본국가전북연대 정기 세미나 오늘 개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원하는 도내 교수정책 모임인 '기본국가연구포럼(공동상임대표 고규진 전북대교수, 이하 연구포럼)'이 15일 오후 4시 전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지역 기본권과 기본소득, 전환국가의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지사의 기본소득을 설계했던 핵심 정책브레인인 대거 참석해 지역기본권과 기본소득의 가치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혁신동력이 될 것이라고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줌(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약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신대 강남홍(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교수,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 전북대 원용찬교수(연구포럼 공동상임대표)가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우석대 최광수 교수(연구포럼 공동상임대표), 전북대 경제학부 노산하 교수, 오성현 미래금융연구소 대표(기본국가청년포럼 대표), 황성조 전 라일보 경제부장 등이 참여, 열린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 주관 단체인 연구포럼은 고규진(전북대 목문과), 원용찬(전

북대 경제학과), 최광수(우석대 보건 의료학과)를 상임공동대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100여 명의 교수들이 활동하고 있다.

주최 단체인 '기본국가전북연대'는 상임고문에 문규현 신부, 여태권 목사, 이광철 전 국회의원, 강동원 전국회의 단장, 전북대 원용찬교수(연구포럼 공동상임대표)를 방용호 한반도 평화본부장(전북본부장), 최희재 전주불어민주당전주위원장, 방세영 공정사회 여성포럼상임대표가 맡고 있으며, 각 계를 대표하는 70여 명의 공동대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기본국가전북연대'는 연구포럼을 포함한 학계, 청년 여성 14개 시·군 지역과 단체 1만2,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이 재명지지 단체이다.

/유호상 기자

'이낙연 상승세'... 민주 대선주자들, 협공

이 전 대표 "좋은 충고... 일일이 대응할 가치 느끼지 않아"

캠프 측 "총리 시절 야당 공세 넘기며 실력 보여" 자신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벌인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선두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추이에 전 법무부 장관 박윤진 의원 등 경쟁 주자들은 14일 이 전 대표를 겨냥한 협공을 벌였다.

이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나한테 가족, (김중) 그걸 막으려 하는 거냐고 한 분이 진짜로 측근 또는 가족 얘기가 많지 않냐"며 "본인을 되돌아보지 문제 없는 저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말이 되겠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터머스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사임한 이 전 대표 측근과 관련해 "그분이 (이 전 대표의) 전남지사 경선 때 당원 명부 까자 당원을 만들고 해서 시정을 받은 분이 아니냐"며 "본인을 되돌아보지 문제 없는 저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말이 되겠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터머스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사임한 이 전 대표 측근과 관련해 "그분이 (이 전 대표의) 전남지사 경선 때 당원 명부 까자 당원을 만들고 해서 시정을 받은 분이 아니냐"며 "본인을 되돌아보지 문제 없는 저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말이 되겠냐"고 일갈했다.

추 전 장관도 전남 뉴시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국무총리 시절은 대단히 인정받고 갖고 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당대표로서는 짐승을 드

린다면 0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저격수로 나선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이 전 대표를 두고 "그저 그런 후보이고 국민에게는 심각한 후보"라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총리로서 부동산전쟁에서 패배한 장수 아니냐"며 "사면론으로 관공을 치르고 당원·당규 고쳐 (재보선에) 후보 내는 걸로 패배를 자초했다"며 "후보가 제대로 내선 승리를 만들 수 없다"고 혹평했다.

경쟁주자들의 공격에 이 전 대표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른 주자들이) 생각보다 참음성이 약하다. 지지를 조금 올라간다고 그걸 못 참고"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의 윤터머스 사건 관련 측근 의혹 제기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추 전 장관과 박 의원의 평가에 대해서도 "좋은 충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이미 총리 시절 야당의 공세를 넘기며 실력을 보였다"며 "검정 과정에서의 공방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합리적 공격이라면 대응해야겠지만 관련 국민과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했냐"며 오히려 공격에 나선 후보의 실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뉴시스

유엔 인권이사회, 韓 주도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이 주도해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이 결의안에는 한국 외 오스트리아, 덴마크, 브라질, 싱가포르, 모로코가 핵심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해 미국, 호주, 등 65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결의는 신기술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포용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 필요성 ▲취약계층을 포함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을 다뤘다.

아울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향후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개최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50차 및 제53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외교부는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대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당 이슈의 적실성이 더욱 증대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신기술 분야 논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